“외국자본 우대한다며 모실땐 언제고…”

자격조건도 대폭 강화 … 형평성 내세워 사실상 내쫓기

■ 성장 가로막는 외국인 투자 기업 규제

입주 업체들 “임대부지 매도를”

#1.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A사. 기아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계획에 따라 현대모비스와 함께 광주 진곡산단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주문 물량이 크게 늘 것을 예상, 현재의 평동공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진곡산단으로 신축·확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동공장 건축물은 매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개월째 새 주인을 못 찾고 있다.

#2. 지난 2007년 네덜란드 자본 100%로 세워진 G사. 외국인자본 500만달러 이상 유치에 따라 임대료의 75%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다 지난 2월 최소건축면적 규정을 어겨 감면 혜택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G사는 연 504만원 납부했던 임대료를 올해부터 5667만원 내게 됐다.

광주 평동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들은 요즘 시름에 가득 차 있다. 2000년대 입주 초기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성장했지만, 최근 임대료가 급등해 부담이 되고 있는데다 외투지역 규제 또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A사의 경우 용도가 없어진 평동공장을 팔아 신축 현장에 투자해야 하지만 사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까다로운 외국인 투자 조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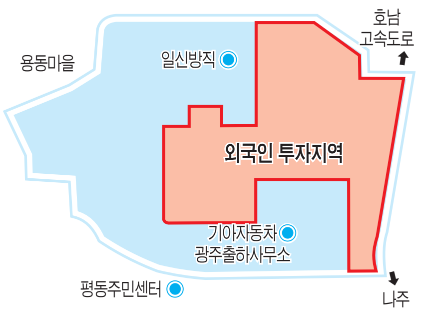
평동외투지역은 2000년 입주 초기만 해도 자본금의 10%만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면 외투기업으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자본금 30%, 토지대금(공시지가) 200%를 유치해야 한다.

자본금 20억원으로 5500평을 임대한다면 입주 초기엔 외국인자본을 2억원만 유치하면 가능했지만 지금은 자본금 6억원에 토지대금(평당 55만원) 60억원을 더해 총 66억원을 유치해야 한다.

문제는 평동외투지역은 대부분 소규모 임대여서 기업들의 외자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A사의 평동공장을 인수하려면 건축물가격 20억원에 대규모 외자유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개월째 매각이 안되고 있다.

G사의 경우는 100% 외투기업으로 외국인 오너의 한국 산업단지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탓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 평동산업단지 현황



▲평동외국인투자지역=광주시 광산구 장록동·옥동·월전동 일대 총면적 109만4000㎡(33만1000평) 규모다. 2000년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64개사에 2897명이 일하고 있다. 생산액은 10조7000억원, 수출액은 1억달러에 달한다. 운송장비·기계전기전자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외투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기업 부채를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어렵다. 자본금을 늘리면 그만큼 외자비율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금을 늘리지 못해 부실기업으로 낙인 찍히고, 금융권의 제약이 뒤따르기 일쑤다. 또 임대토지라는 이유로 대출금리는 일반기업보다 2~3% 높고, 대출액은 30%가량 적게 이뤄진다.

입주기업들은 이같은 문제의 해법으로 임대부지 분양을 주장하고 있다. 평동외투지역경영자협의회는 최근 입주기업 64개사 중 58개사의 서명을 받아 지식경제부 등에 ‘부지매도 청구’(임대부지 분양)를 요구했다.

이들은 “부지 임대차에 따른 각종 규제는 입주기업의 증자 등 신규투자유치를 통한 사업 확장의 한계, 은행과의 금융거래 불이익, 경영상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공장부지 매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입주기업들은 법적으로 임대부지 매도가 가능한데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부지를 매도한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관계자는 “평동외투지역의 경우 소규모 임대가 대부분으로 기업들이 영세해 외자유치에 한계가 있다. 지역적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지경부도 외투지역 해제 요건, 매도의 합리적 기준, 법적 근거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선 출마 김두관 경남지사직 사퇴

박준영 지사에 영향 줄까

컷-오프 결과 따라 결정할 듯

김두관 경남지사가 오는 6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같은 광역단체장 신분으로 대선 도전을 선언한 박준영 전남지사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2일 “오는 8일 해남 땅끝 마을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그 전인 6일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강당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직원들에게 이 같은 결심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6일까지 도지사직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대선 도전을 위해 지사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섬에 따라 지난달 27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해 놓고도 아직 사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박준영 전남지사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박 지사는 대선 출마에 따른 지사직 사퇴 여부와 관련, “지사직 유지의 필요성도 있고 진정성을 보이려면 그만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처음부터 봉사하고자 했던 책임 의식도 고려해서 차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 경남지사의 ‘배수진’이 박 전남지사에 부담은 되겠지만 당장 지사직 사퇴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경선에 앞서 치러지는 컷-오프 통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사직 사퇴는 박 지사에게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김 지사가 영남 민심을 놓고 문재인 후보와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하는 등 정치적 상황도 박 지사와는 다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한 채 컷-오프에 참여하고 결과에 따라 사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컷-오프를 통과한다면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높고 탈락한다면 패배를 인정하고 남은 임기 동안 지사직에 전념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사직 사퇴가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기 보다는 원칙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원칙적 성향이 강한 박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지사직 사퇴를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박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은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며 이번 주 내에 여의도 인근에 선거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盧정권’ 탓으로 하기도 지겹고 …

국가 균형발전 상징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출범

9월부터 부처 이전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2일 오전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공약한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신행정수도 후속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결정, 세종시 수정 추진 등 숫한 논란을 거친 뒤 10년만이다.

출범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정부 인사와 새누리당의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 및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등 정치권 인사, 유한식 세종시장, 신정균 세종시 교육감,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 앞서 유한식(63) 세종시장은 같은 장소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2010년 12월 27일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는 관할 구역에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운영된다. 따라서 광역·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2일 오전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황식 총리, 박근혜 전 대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유한식 세종시장 등이 세종시 출범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연합뉴스

관할 구역은 연기군 전역(361.4㎢), 공주시(77.6㎢), 청원군(27.2㎢) 일부를 흡수한 465.2㎢로, 면적은 서울의 77% 규모다.

조직과 정원은 각각 1실·3국61본부 25과, 958명(일반 828명·소방 130명)으로 확정됐고, 양 부시장(행정·정무), 실·국장, 과장의 직급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같다.

세종시의원은 연기군 출신 충남도의원 3명, 연기군의원 10명, 공주시의원, 청원군의원 각 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세종시의회 의장은 전날 유환준(66) 전 충남도의원이 선출됐다.

세종시에는 오는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2014년 말까지 1실·2위원회·9부2처3청 등 17개 정부부처와 20개 소속기관 등 37개 기관이 차례로 입주한다. /연합뉴스